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메트로미디어에서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오른쪽)와 문형남 (주)웹발전연구소·한국ICT인증위원회 대표이사가 업무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메트로미디어-웹발전연구소

공공기관 웹개방성 확대 '맞손'

이장규 대표 "스마트미디어 선도"

메트로미디어와 웹발전연구소, 한국ICT인증위원회가 공공기관 웹개방성 확대를 위해 손을 잡았다.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메트로미디어는 지난 달 31일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본사에서 웹발전연구소, 한국ICT인증위원회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웹개방성과 모바일 앱에 관한 품질인증마크 및 인증서 발급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웹개방성은 웹에 공개된 정보에 이용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접근해 이용하고, 웹사이트의 정보를 자유롭게 공개·공유할 수 있는 것을 뜻 한다. 웹사이트가 완전히 개방된다면, 일반 사용자들은 굳이 해당 기관 사이트에 들어가 로그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포털 사이트 등 검색엔진을 통해 공공기관이 가진 자료를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으로 메트로미디어와 두 기관은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대학 등을 대상으로 웹개방의 중요성을 적극 알리고, 우수 기관에는 웹개방성(WOI)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등 웹개방성 확장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현재 웹발전연구소는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대학 등의 웹개방성을 평가하는 '웹개방성평가지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처음으로 웹

개방성 우수 기관에는 웹개방성(WOI)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웹사이트를 완전히 개방한 기관은 극히 일부 분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웹사이트 관리자가 정보를 차단하는 이유는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로 침해를 막기 위해서다. 검색엔진의 접근을 허용하면 웹서버의 기능이 저하될 것이라 우려도 일부 반영됐다.

웹발전연구소·한국ICT인증위원회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문형남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상당수의 공공기관 웹사이트가 처음부터 검색엔진 접근을 차단한 상태로 개설됐지만 그 사실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웹에 공개된 정보는 모든 국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것부터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메트로미디어와 두 기관은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알리는 일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메트로미디어 이장규 대표이사는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터넷신문의 '데이터 저널리즘'을 강조한 바 있다"며 "공공기관이 가진 사회·경제적 가치가 높은 정보 자산을 활용해 스마트 미디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결약재에 원화 약세 당분간 지속"

» 1면 '경제전쟁 후폭풍' 서 계속

문홍성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 연준 결정에 이어 일본 무역분쟁으로 국내 수출산업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어 한동안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1200원 선이 일시적으로 깨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일본의 무역 규제 등 약재가 산적해 달러당 원화값이 1200원 선으로 급락할 수 있다"면서도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사태에 이어 외환시장까지 출렁이는 모습을 보면 시장 불안감이 커지기 때문에 당국이 시장 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력해 시장안정화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주가, 금리가 상당폭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큰 폭 상승한 것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더해 미국의 대(對)중국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이 함께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 일본의 수출규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될지에 따라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시장안정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희주 기자 hjs9@

외人매도·반대매매 등 증시 먹구름 경기 불확실성에 장기 채권값 상승

연초 이후 코스피지수 2.1% 하락 전문가 "韓 주식비중 축소" 권고 채권 장단기 금리차 최저 수준으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키로하면서 한국 증시가 흔들렸다. 외국인은 한국 증시를 팔기 시작했고, 채권시장 지표도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연초 이후 코스피지수는 2.1% 내렸다. 해당기간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15.0% 오르고,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13.5% 오른 것과 대조적인 흐름이다. 연초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하반기에는 일본 무역 보복이 한국 증시를 위축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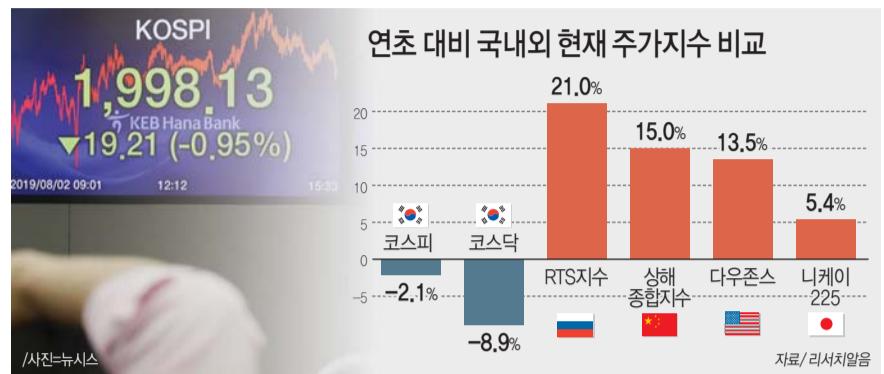
◆코스피 2000선 붕괴

지난 2일 코스피지수는 전일보다 19.21포인트(0.95%) 내린 1998.13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000선을 밀든 것은 올해 1월 3일(1993.70) 이후 처음이다.

더 큰 하락을 막은 것은 연기금의 매수세다. 이날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3985억원어치 주식을 팔아치울 때 연기금이 4626억원어치를 매수하면서 주가 하락을 방어했다.

증권사 지점은 '반대매매'로 몸살을 앓았다. 반대매매는 증권사의 돈을 빌려 매수한 주식(신용거래) 가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거나, 외상거래로 산 주식(미수거래)에 대해 결제 대금을 납입하지 못할 때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이다.

신용거래에 대한 반대매매 규모를 공식 집계한 통계는 없으나 미수거래에 대한 반대매매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8.9%로 연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 31일 역



시 7.1%로 올해 두 번째로 높았다.

덕분에 신용융자 잔고는 9조2000억 원 수준으로 내려왔지만 이것도 지난 해 연말보다 높은 수준이다. 추가 하락 시 반대매매를 당할 수 있는 '시한폭탄'인 셈이다.

증권사들은 이번에는 "한국 주식 비중축소"를 권고하고 있다. 많은 약재 속에서 '저가매수'를 외쳤던 상반기 기조 와는 달리 주식 투자를 당분간 자제하라는 조언인 셈이다. 한국과 일본의 전면금리 역전은 통상 경기침체를 예고하는 지표로 여겨진다.

금리 하락에 따라 채권값은 상승하고 있지만 회사채의 사정은 다르다. 증권사 지점에서는 이미 '미수 채권'이 쌓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기 부진 속 달러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 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한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는 "미수 채권이 대량 발생해 지점에 비상이 걸렸다"면서 "채권 주가연계증권(ELS) 중에서도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한 상품이 발생했고, 회사채를 담고 있는 코스닥벤처펀드, 그 중에서도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투자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한광열 NH투자증권 연구원 "국내 크레딧 시장은 기업의 신용도 약화 우려가 높기 때문에 하위 등급보다는 우량 등급 채권에 대한 선호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시중은행 "日 규제 피해기업에 돈 푼다"

신한은행, 1조 규모 신규대출 지원
우리은행, 3조 규모 금융지원 나서
KB국민, 만기도래 여신 상환 유예

일본의 수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금융권도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돈줄을 죄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 역시 시중은행의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선 담당자에 대해선 면책방침을 확실히 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일시적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업체당 10억원 이내 총 1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할상환을 유예할 예정이며, 신규 및 연기 여신에 대해서 최고 1%포인트까지 금리를 낮춰준다.

이와 함께 '일본 수출 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련 정부지원 정책 등 각종 정보 및 재무 컨설팅을 제공

하고,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 기업 여신지원 전문 심사팀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3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대표적인 수출규제 피해산업의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상생대출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별출연을 통해 이달 중 5000억원을 우선 지원하며, 오는 2020년까지 1조5000억원 규모의 여신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피해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 특별지원자금'을 조성해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만기연장이나 분할 상환, 납입 기일 유예 등을 통해 상환 부담도 낮출 방침이다.

어려움에 처한 소재, 부품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신금리를 최대 1.2%포인트 우대해주며, 핵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특화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우선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피해 기업의 만기연장에 대해서는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2%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대표적인 수출규제 피해산업의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상생대출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별출연을 통해 이달 중 5000억원을 우선 지원하며, 오는 2020년까지 1조5000억원 규모의 여신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규제 영향이 높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부품 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특별우대금리로 신규자금을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

KEB하나은행은 ▲수출제한조치 피해기업 ▲금융보복 피해기업 ▲불매운동 피해기업 ▲대체품목 생산기업 등으로 구분해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NH농협은행 일본의 경제보복이 농식품 수출입 분야로 확대될 것에 대비해 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 퍼포카 농기기 대해서도 금융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안상미 기자